



의안번호	제 2018 - 13호
의 결 연 월 일	2018. 6. 11. (제87차 회의)

보  
고  
안  
건

##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1
II. 전문위원 연임 위촉 .....	2
II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1. 개요 .....	4
2. 폭력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4
IV.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1. 개요 .....	18
2. 관련 규정 .....	18
3. 의견수렴 계획 .....	18
4. 시행 일정 .....	24
V.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의결 후 절차)	
1. 개요 .....	25
2. 관련 규정 .....	25
3. 공개 방법 .....	26
4. 추진 일정 .....	26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	27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17차	2018. 5. 28. 15:00	○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 형기준 수정안 심의

## II. 전문위원 연임 위촉

### 가. 개요

- 2018. 5. 15.자로 강수진, 김혜경, 한상규, 이진국 전문위원 각 임기 만료
-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전문위원 위촉

#### ◆ 관련 규정 ◆

##### 양형위원회규칙 제8조 (전문위원)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 나. 고려사항

- 연구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분위기 쇄신
  - 종전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제1, 2, 3, 4, 5기 양형기준 수정 및 제6기 후반기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업무 수행
- 정기적인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전문위원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
  - 그동안의 전문위원의 연구 성과와 활동 내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평가하여 개선 방안 모색
- 전문위원 선정 원칙의 반영
  -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 유지·강화
  - 전문위원 연령 및 전문성 고려
  - 다양한 전공분야 안배
  - 추천 기관 또는 위원 의견 존중

다. 위촉 내역

-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8. 5. 16.자)
-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8. 5. 16.자)
- 한상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8. 5. 16.자)
-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8. 5. 16.자)

### III.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보고

#### 1. 개요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하여 양형위원회규칙 제11조에 따라 대법원, 국회,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 대상 기관

- 전문위원단 검토 내용을 기초로 양형위원회 제85차 회의(2018. 3. 26.)에서 의결한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나. 조회 기간

- 2018. 3. 30. ~ 2018. 4. 30.

##### 다. 회신 기관

###### ○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35개 조회 대상 기관 중 4개 기관이 회신
- 대법원(중앙, 광주, 대전지방법원 포함), 법무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라. 회신자료

- 별첨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자료」와 같음

#### 2.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회신 의견 종합

##### ◆ 절도 및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회신 의견

###### 가. 대법원

###### (1) 대유형 1 [일반적인 상해]

- (가) 일반상해의 감경영역의 상한을 낮춘 부분에 대하여(1년 → 10월), 이를 수정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양형 선택의 재량이 제한되고 형이 부당하게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견해가 있음

(나) [일반상해]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2년 6월로 높인 것은 타당하나, 대유형 3의 [폭행치상]의 가중영역(6월 - 3년)와 비교하면 여전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① [일반상해]와 [폭행치상]은 법정형이 동일하고 고의의 측면만 보면 [일반상해]가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도, 양형기준은 반대로 되어 있음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확대한 것은(7년 → 8년)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2) 대유형 2 [특수상해·누범상해]

(가)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형 변화가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유형으로, 양형기준 수립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 폭처법 제2조 제1항 삭제에 따라 상습범을 유형분류에서 삭제하는 대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는 전반적인 개정 방향은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

(나) [특수상해]의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너무 낮게 설정되었다는 견해가 있음

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법정형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은 중상해의 경우와 대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음

② 특히 특수상해죄의 경우 기본영역의 하한이 이미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번 한 형량까지로 내려가 있는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하여져 있는 유형의 범죄 중에 이와 같이 기본영역의 하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지나치게 낮다는 견해가 있음. 기존에 폭처범위반(집단·흥기등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지나치게 높아 실무상 작량감경을 쉽게 하여 온 관행이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으로 낮아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관행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본영역의 하한을 중상해의 그것(1년)에 맞추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상향(8월, 10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③ 감경영역의 하한(4월)에 이르기 위하여는 감경을 두 번 해야 하고, 실무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징역 4월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례도 매우 희소해보일뿐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범죄에서 그와 같이 양형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사례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바,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만 굳이 감경영역의 하한을 그정도까지 낮추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다) 대유형 3 [폭행범죄], 대유형 4 [협박범죄]

- ▶ 대체로 적절한 수정안이라는 의견이 있음

(라) 폭력범죄 양형인자 수정안

- ▶ 대체로 적절한 수정안이라는 의견이 있음

(마)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

- ▶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공무집행의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축소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의

흐름에 반하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① 양형기준은 '벌금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미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가리게 되는 경우는 대체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부정적 참작사유를 축소하여 얻는 실익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임

#### (바) 기타 의견

- ▶ 실무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이 적절하게 수정된 것 같다는 의견이 다수임
-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상해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58조의2를 추가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의 미비점을 적절히 보완한 것으로 보임
- ▶ 다만 일반적인 상해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한이 8년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조금 더 상향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 ▶ 유형분류를 조금 더 세분화한 것, 일부 영역의 상한을 조금 높이고, 하한을 조금 낮춘 것은 적절해 보임(폭력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이 약간 늦은 감이 있음)

### 나. 법무부

#### (1) 개요

- '18. 4. 11. 대법원 제6기 양형위원회,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검토요청

#### (2) 수정안에 대한 의견

##### [폭력범죄 형량범위 관련]

(가) 보복목적 상해에 대한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향 필요

- ▶ 수정안은 ‘중상해’의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한을 3년에서 4년으로 상향하였으나, ‘보복목적 상해’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을 3년으로 현행 유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10월	4월-1년6월	6월-2년2년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8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 ▶ 그러나 ‘보복목적 상해’의 경우 △‘중상해’보다 법정형이 중한 점, △보복목적으로 중상해를 가한 경우 법정형이 중한 ‘보복목적 상해’로 기소하게 되면, ‘중상해’로 기소했을 때보다 낮은 형량범위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목적 상해 가중영역의 상한도 4년으로 상향함이 상당

※ 보복목적 상해 1년 이상(상한 30년),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나) 일반협박 범죄에 대한 가중영역 형량범위 상향 필요

- ▶ 수정안은 상습협박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을 삭제에 함에 따라 상습협박을 유형에서 제외하고, 일반협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월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누범·특수협박	4월2월-1년	6월4월-1년6월	8월6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 ▶ 상습협박의 법정형 상한이 4년 6월에 이르고, 유사 법정형을

가진 범죄군의 가중영역의 상한이 3~4년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협박의 가중영역의 상한 역시 2년으로 상향함이 상당

#### [폭력범죄 양형인자 관련]

(가) 특별감경인자인‘미필적 고의’의 일반감경인자화 검토 필요

- ▶ 양형기준 상 ‘미필적 고의’를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고 있음
- ▶ 폭행·협박은 단순 거동범의 성격이 강하여 개념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고,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할 통계적 근거 검토 필요
- 위증범죄는 ‘미필적 고의’를 일반감경인자로 취급
- ▶ 폭력범죄에서의 ‘미필적 고의’는 일반감경인자로 취급함이 상당

(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의 일반감경인자화 등 검토 필요

- ▶ 양형기준 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취급하고 있음
- △재산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적절성 검토 필요, △‘상당 부분’의 의미의 명확화 필요
- ▶ 폭력범죄에서의 ‘상당 부분 피해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취급함이 상당하고, 요건 명확화 검토 필요

####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관련]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 수정안은 기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
- 기존 사유는 가별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한정하자는 것임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 <u>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무방 해의 정도가 중한경우</u>	

- ▶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에서 이를 달리 규정하는 것은 체계부정합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 있는 점('공무집행방해'시 가중양형요소에 해당하면서 집행유예는 허용하는 모순),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수정('16년)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인자 등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수정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고려
- ▶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유지함이 상당

(나) 부정적 사유중 일반참작사유“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와 주요참작사유“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변경

- ▶ 수정안은 기존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인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변경

구 분	부정적	긍정적
일반참작 사유	○ 불특정 <u>또는 다수의</u>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범행	

-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통합하고 이를 단일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함이 상당

- 다른 범죄\* 양형기준 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함

\* 업무방해, 사기·공갈, 재물손괴 등

## 다. 한국여성변호사회

### (1) 폭력범죄 양형기준 수정 배경

헌법재판소는 2015. 9. 14.경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 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그 취지에 따라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함) 및 형법이 개정되었는바, 개정과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 위헌결정 부분을 삭제하고, 기존 상습범에 대한 가중이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도 삭제하였으며, 형법 일부 폭력범죄의 법정형이 하향되거나 일부 문구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사항을 폭력범죄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불가피할 것이라 할 것입니다.

## (2)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유형분류 및 형량범위)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 ▶ 이하 각 폭력범죄 유형분류에 따라 수정된 양형기준 내용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힙니다.

### (가) 수정된 상해범죄 양형기준표<sup>1)</sup>

<표 1. 대유형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del>10월</del>	4월-1년6월	6월-2년 <del>2년</del> 6월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del>4년</del>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del>8년</del>

<표 2. 대유형 1.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 특수상해	4월-1년	6월-2년	1년-3년

### (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에 관하여

상습상해에 관한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삭제되고, 형법 제264조로 포섭됨에 따라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2. 중 상습상해를 범죄유형에서 제외하고, 대유형 1. 일반적인 상해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상습범의 법정형을 포섭하기 위하여 대유형 1. 중 일반상해 유형과 중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 것은 아니나, 종래 헌법재판소는 지

1) 해당 양형기준표는 금번 수정된 내용만을 발췌·정리하였습니다. 이하 양형기준표도 동일합니다.

속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상습범에 대한 가중이 지나치고, 특히 상습범은 형을 가중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사회치료 등 필요한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게 낫다는 지적 등도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상습범의 행위자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구 폭력행위처벌법 상 상습범에 대한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 위 양형기준표 대유형 1. 중 일반상해 유형과 중상해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각 상향 조정한 것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 그 외 수정내용에 관하여

- ▶ 상해치사(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중영역의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차적으로 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차적으로 법원에 의한 개개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형의 양형기준 설정을 통하여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다는 측면에서 ① 최근 엽기적인 강력범죄 등이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점, ②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일반인의 법 감정, ③ 재발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한 수정내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 폭력행위처벌법 상 특수상해 조항을 삭제하였고, 형법에 특수상해 등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해당 법정형이 하향된 법률개정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특수상해의 형량범위를 해로이 정하고, 특수상해 하한과의 관계에 따라 대유형 1. 중 일반상해 유형 감경영역의 하한을 현행 1년에서 10월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고 필요한 양형기준 수정이라고 보입니다.

### (3)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유형분류 및 형량범위)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 (가) 수정된 폭행, 협박범죄 양형기준 표

<표 3. 대유형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2월-10월	4월- <del>1년</del> 1년6월
2	운전자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 <del>7년</del> 8년
3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 <del>2월</del> -1년2월	6월 <del>4월</del> -1년10월	8월 <del>6월</del> -2년4월

<표 4. 대유형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 <del>2월</del> -1년4월	6월 <del>4월</del> -1년6월	8월 <del>6월</del> -2년

#### (나) 상습범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에 관하여

상습폭행에 관한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삭제되고, 형법 제264조로 포섭됨에 따라 상습폭행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고, 소유형 1. '일반폭행'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되, 상습범의 법정형을 포섭하기 위하여 해당'일반폭행'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습협박에 관한 구 폭력행위처벌법이 삭제되고, 형법 제285조로 포섭됨에 따라 상습협박을 범죄유형에서 제외하고, 소유형 1. '일반협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위 2.항 2나.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상습범의 행위자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구 폭력행위처벌법 상 상습범에 대한 제2조 제1항을 삭제하고,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개정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상습범을 일반폭행과 일반협박의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점, 법정형을 포섭하기 위하여 소유형1. '일반폭행'의 가중영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한 점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라 사료됩니다.

#### (다) 그 외 수정내용에 관하여

- ▶ (1) 운전자폭행치사의 경우 가중영역의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상향조정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법원의 양형판단의 재량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위 수정내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 ▶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폭력행위처벌법 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조항을 삭제하였고, 각 형법 261조(특수폭행, 징역 5년 이하), 형법 284조(특수협박, 징역 7년 이하)로 포섭되었는바,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하향된 점을 반영하여 각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각 형량범위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양형기준 수정이라고 판단됩니다.

#### (4) 폭력범죄 집행유예 기준 수정안과 이에 대한 검토의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중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태양과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가 됨으로써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 및 다른 유형 폭력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만을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한한 것은 적절한 수정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중 ‘불특정 피해자’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로 수정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의 죄질이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범죄의 죄질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취지에서 기존 ‘불특정’이라는 용어는 ‘불특정’ 내지 ‘다수’를 포괄하여 지칭해온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 (5) 결어

국민들이 지지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에 일치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안은 피고인들과 일반인들로 하여금 선고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로 인해 속칭 문제되고 있는 고무줄 양형과 같은 문제와 일반인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양형기준의 수정안은 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그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 수정사항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이 잘 반영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 성폭력 범죄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별첨]자료와 같음

## IV. 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수렴 계획 보고

### 1. 개요

- 위원회는 양형기준의 설정 절차를 객관화·투명화하는 동시에 양형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 제11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 제17조(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

-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1항의 양형기준 초안 또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 전문가 등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3. 의견수렴 계획

#### 가. 대상 양형기준 수정안

- 제87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양형기준 수정안(손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나.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문 화 재 청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7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8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9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0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1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2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3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4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5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6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17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사무총장
18		한 국 형 사 소 송 법 학 회	총무간사
19		한 국 형 사 판 례 연 구 회	총무간사
20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1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2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3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5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7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28	시 민 단 체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29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30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31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32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33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34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5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다.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대상기관 선정  
(안)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	입 법 부	국 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	사 법 부	대 법 원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실)
3	행 정 부	경 찰 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행정법무담당관
5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법무감사담당관
6		법 무 부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7		행 정 안 전 부	법무담당관
9		법 제 처	운영지원과장
		보 건 복 지 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0		여 성 가 족 부	법무감사담당관
11	헌 법 재 판 소	행정관리국장	
12	연 구 기 관	대 한 범 죄 학 회	사무국장
13		한 국 교 정 학 회	사무국장
14		한 국 법 학 교 수 회	사무총장
15		한 국 법 학 원	총무이사
16		한 국 비 교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연번	구분	기관	비고
17		한 국 형 사 법 학 회	총무간사
18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기획조정실장
19		한 국 형 사 정 책 학 회	총무간사
20		한 국 피 해 자 학 회	사무총장
21	유 관 기 관	대 한 법 무 사 협 회	사무총장
22		대 한 법 률 구 조 공 단	사무총장
23		한 국 범 죄 방 지 재 단	사무총장
24		대 한 변 호 사 협 회	사무총장,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6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2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28		한 국 여 성 변 호 사 회	사무총장
30	시 민 단 체	중 앙 노 인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1		중 앙 아 동 보 호 전 문 기 관	정책연구팀장
32		참 여 연 대	사법감시센터, 청년참여연대
33		한 국 가 정 법 률 상 담 소	총무부장
34		한 국 Y M C A 전 국 연맹	사무총장
35		한 국 Y W C A 연 합 회	사무총장
36		한 국 여 성 단 체 연 합	사무총장
37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	소장

연번	구분	기관	비고
38		한 국 여 성 의 전 화	사무처장
39		한 국 여 성 민 우 회	사무처장
40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무처장

#### 4. 시행 일정

○ 의견조회 기간 : 2018. 6. 12~ 7. 2.

○ 의견조회 취합 : 2018. 7. 3.

※ 의견수렴 결과는 위원회 제88차 회의(2018. 7. 23.) 시 보고 예정

## V. 폭력범죄 수정 양형기준 공개 (의결 후 절차)

### 1. 개요

-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의 공개는 양형기준 적용의 투명화, 적정화 및 양형기준 개선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형기준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 2. 관련 규정

- 양형위원회규칙

▶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 ① 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 양형위원회 운영규정

▶ 제20조(양형기준의 효력발생시기)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날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는 관보게재일 이후의 날을 지정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3. 공개 방법

- 관보 게재(전자관보 및 종이관보)
  - 관보게재 :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양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게재
- 양형기준 책자 발간

### 4. 추진 일정

- 양형기준 의결 예정 : 2018. 6. 11. 양형위원회 제87차 회의
- 관보 게재 의뢰 : 2018. 6.말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2018. 7. 중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 VI.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가. ‘국민신문고 게시판’

○ 접수의견

순 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8. 4. 27.	○ 청소년들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
2	2018. 5. 8.	○ 모든 범죄에 있어서 형량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
3	2018. 5. 14.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뇌물죄 및 횡령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을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주장함.
4	2018. 5. 14.	○ 집행유예를 월 단위로 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에 관하여 그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내주신 의견은 청소년들에 의한 강력범죄 관련한 양형기준의 전반적인 보완 과정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모든 범죄에 있어서 형량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 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시 양형위원회 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 3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형법의 규정에 따른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므로 법정형 하한의 1/4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에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량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 다만, 화이트칼라범죄의 엄정한 처벌 필요성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며,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

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4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먼저, 양형과 관련한 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유예기간을 월 단위로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유예기간을 연 단위로 정하는 것이 실무상의 통례입니다.
- 우리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나. 민원 우편

○ 접수 의견

순 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1	2018. 5. 4.	○ 민원인은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으로 추정되며 양형기준과 권고형량의 범위에 대해 답변하여 달라는 내용
2	2018. 5. 9.	○ 민원인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으로 수감중인 피고인의 아내로 추정되며, 남편에 대하여 선



순 번	접수일자	질의요지
		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내용

○ 1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은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형기준에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제1심 법관뿐만 아니라 항소심 법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제1심 판결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판결문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제1심 판결이 명시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없는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 2번 질의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개별 형사재판에서의 법관의 판단 및 재판 결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

-